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의안 번호	5835
----------	------

## 청 원 요 지 서

접수년월일	2021. 2. 17		접수번호	2021-1
청원인	주소		성명	김태일
소개의원	김동식 의원		소위관회	기획행정위원회
건명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 청원요지 》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관련 조례 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함께 병기하여 테마파크의 건립의미와 유족들의 바람을 세우고자 함.				
《 청원내용 》				
○ 테마파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화재참사를 계기로 2008년 12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에 건립하였고,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국민성금에서 50억원 출연하였음.				
○ 테마파크 개관 후 12월28일에 대구시와 대구지하철참사회생자대책위원회의 합의서에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라고 합의가 완료된 상황임.				
○ 이에 테마파크의 건립의미와 유족들의 바람을 세우고,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고자 기존의「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테마파크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함께 병기하는「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2.18기념공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개정을 청원하고자 함.				

##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건.	
청원인	주 소	
	성 명	김 태 일
소개의원	김 동 식 (인)	
소개연월일	2021. 2. 17.	

■ 소개의견

○ 2003년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참사를 계기로 2008년 12월 18일 개관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는 국·시비 200억, 화재참사국민성금 50억으로 건립됨.

○ 테마파크 개관 후 며칠 뒤인 12월 28일에 대구시와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이하 희생자대책위)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라고 합의를 함.

○ 하지만 이후 13년간 희생자대책위의 명칭변경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18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상황.

○ 따라서 지하철화재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테마파크의 건립의미를 되찾고, 유족의 바람과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2008년 12월 28일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 간의 지하철사고수습(추모사업) 관련 합의내용 중 일부인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라는 합의내용 근거에 따라 조례개정을 해달라는 내용임.

## 청 원 서

■ 제목 : 『대구광역시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 청원취지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관련 조례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함께 병기하여 전테마파크의 건립의미와 유족들의 바람을 세우고자 함.

■ 청원이유

- 테마파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화재참사를 계기로 2008년 12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에 건립하였고, 비용은 국·시비 200억 원,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국민성금에서 50억 원 출연.
- 테마파크 개관에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국민성금 50억 원을 출연하였고, 테마파크 바로 옆에 화재참사사망자 192명의 명단이 적힌 추모탑조차 공식적으로 ‘추모탑’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테마파크의 명칭에서조차 대구지하철화재참사의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테마파크의 건립의미도 사라지고, 시민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고 있음.
- 2·18안전문화재단에서 발주하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한 『대구지하철참사 추모사업과 팔공산 동화지구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 중 추모사업활성화 건[첨부1]을 보면 유족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테마파크의 ‘2·18기념공원’의 이름의 명칭병기 건.
- 소방본부는 소방청의 명칭통일 예정과 테마파크의 건립목적 불일치를 이유로 수용불가라는 입장. 소방본부 측의 근거는 이 조례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
- 하지만, 유족측이 주장하는 ‘2·18기념공원’ 명칭병기는 설치, 운영과 설치에 관한 내용적인 명시가 아니라 대구시, 소방본부 측에서 공히 밝히고 있는 2·18지하철화재참사를 계기를 만들어진 테마파크 명칭에 건립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2·18기념공원’ 명칭병기만을 원하고 있음.
- 또한, 테마파크가 2008년 12월 19일 개관 후 며칠 뒤인 12월 28일에 대구시와 대구지하철참사희생대책위원회의 ‘합의서’[첨부2]에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라고 합의가 완료된 상황.


- 이에, 합의를 근거로 관련 조례의 테마파크 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함께 병기하여 테마파크의 건립의미와 유족들의 바람을 세우고,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기 위함.

#### ■ 요구의 주된 내용

-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화재참사를 계기로 개관한 테마파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
- 2008년 12월 28일 대구시와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합의함.
- 청원취지와 이유에서 밝힌바 테마파크의 건립의미를 되찾고, 지하철참사 유족들의 바람을 세우고,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지하철사고수습(추모사업) 관련한 합의내용의 일부를 추진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2·18기념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18기념공원**'의 명칭을 함께 병기하는 조례개정을 청원하고자 함.

#### ○ 청원인

- 주 소 :

- 성 명 : 김 태 일 

- 연락처 :

○ 소개의원 : 대구시의원 김 동 식

## [첨부 1] '대구지하철참사 추모사업과 팔공산동화지구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 중 추모사업활성화 권

유족 요구사항	검토 내용	부서
1. 추모공원 - 2·18기념공원 명칭 병기	· 소방청 방침에 따라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전국 시도 명칭통일 예정('21년 상반기) ·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목적과 불일치 · 상가변영회 반대	소방본부 (테마파크)
2. 희생자 묘역 - 수목장(192그루 식재) - 유골함(영구 안치)	· 수목장, 유골함은 법률상 조성불가(자연공원법) ·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치하더라도 지하철화재사고 유족은 이용 불가. ※ 공설수목장림 : 공원구역 거주주민 사망 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소방본부 (테마파크)
3. 위령탑(추모비) - 안전상징조형물 명칭 변경	· 인근주민 및 상가변영회 동의하면 명칭변경가능	소방본부 (테마파크)
4. 유품전시관 - 안전교육관 내 유품전시관 운영	·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유품전시관(교육적 가치 있는 것), 유족사무실(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조건)설치 가능.	소방본부 (테마파크)
5. 유족사무실 - 안전교육관 내 유족사무실 운영		
6. 기념도서관 - 2·18도서관 운영	· 기념도서관은 공간 부족('20.7월 직제 개편) · 테마파크 인근 기존 건물 매입 및 신축시 추가 동의(유족, 인근주민, 상가변영회)필요. - 매입·건축비 등 7억 원 정도 필요	소방본부 (테마파크)
7. 시민안전의 날	· 조례로 지방 기념일 제정 가능 - 시민들의 공감대 및 지지확보 필요. · 타 안전 등 기념일 산재<국민안전의 날(4.16),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대구시민의 날(2.21)> 등	사회재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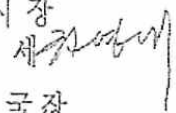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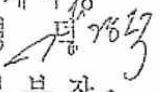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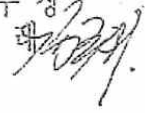
[첨부 2] 2008. 12. 28. 대구시, 대구지하철참사의생자대책위원회의 지하철사고수습(추모사업) 관련 합의서

- 합 의 서 -

지하철사고수습(추모사업)관련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의 합의 또는 약속사항을 다음과 같이 서로 확인하고 대구시가 성실히 이행키로 합의한다

- 안전상징조형물 건립비 일부로 인접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 자원봉사실은 유족 자원봉사자 요구시 사용토록 한다.
- 유품전시실 전시물에 관하여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전시한다.
-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추모벽 설치는 도시철도공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 재단설립은 기 합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추진한다.

2008년 12월 28일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권영세   
건설방재국장  
강경   
소방본부장  
김국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윤석 